광남일보

조간 제 8023 호 대표전화 062-370-7000

GwangNam.co.kr

2026년 2월 9일 월요일 (음력 12월 22일)

AI·에너지 결합…수도권 대응 '초광역 생태계' 구축

〈광주〉 〈전남〉

시, 국가 AI 시범도시…데이터·인재·실증 인프라 확보
도, 해상풍력·태양광 등 대규모 에너지 생산 체계 갖춰
행정통합, 산업 구조 재편 분기점…제도적 뒷받침 필요

행정통합 '전남광주특별시' 발전방안 및 제언

〈1〉프롤로그
〈2〉카지노 복합리조트 등 관광인프라 확충
〈3〉군 공항 이전·무안국제공항 활성화
〈4〉AI·에너지·모빌리티 클러스터
〈5〉글로벌관광벨트 구축
〈6〉광역교통망 재정비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통합특별시의 미래 핵심 산업 전략으로 AI 기반 첨단 에너지·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이 부상하고 있다. 광주의 인공지능(AI)·미래모빌리티 산업 역량과 전남의 에너지·우주·바이오 자원을 결합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관련기사 3면

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총 387개 조문으로 구성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이러한 산업 통합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례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광주의 AI 산업과 전남의 에너지 산업을 축으로 초광역 산업벨트를 형성해, 호남권을 남부권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이 법안 전반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실제 광주는 국가 AI 시범도시로 지정된 이후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데이터·인재·실증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왔다. AI 반도체,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 미래차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기업 집적이 이뤄지고 있으며, AI 기술을 기존 산업에 접목하는 실증 사업도 확대되는 추세다.

광주시의 AI 산업 전략은 단일 기술 육성에 머무르지 않고, 모빌리티·제조·서비스 전반의 산업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남은 전국 최대 수준의 재생에너지 자원과 산업 부지를 보유한 지역이다.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에너지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주·해양·바이오 등 신산업 영역으로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서남권을 중심으로 RE100 국가산업단지와 AI 데이터센터,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면서 전남의 에너지 기반은 첨단 산업 유치의 핵심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규모 전력 공급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은 글로벌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 경쟁에서도 전략적 강점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광주와 전남의 산업 구조는 상호 보완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는 AI 기술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대규모 전력 공급과 산업 확장에는 한계가 있고, 전남은 풍부한 에너지와 공간을 갖췄지만 첨단 기술과 연구 인프라의 집적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행정통합을 통해 두 지역을 하나의 산업 권역으로 묶을 경우, AI 연산과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전력 비용과 탄소 배출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도 부합하는 모델로 평가된다.

모빌리티 산업에서도 통합 효과가 기대된다. 광주의 미래차·자율주행 기술에 전남의 항만·조선·해양 물류 인프라가 결합될 경우, 육상 중심 산업에서 해상·항공·에너지 연계 산업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우주항공, 해상풍력, 수소 산업과 연계한 차세대 이동수단의 실증과 상용화 역시 통합 특별시 체제에서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항만·공항·산업단지를 연계한 대규모 실증 환경은 단일 지자체 체제에서는 구현이 어려웠던 영역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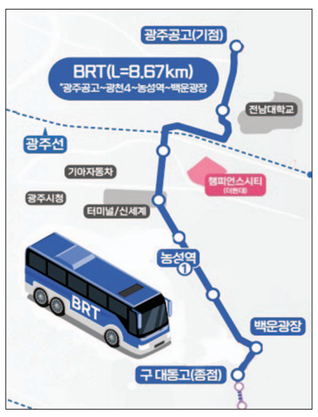
다만 이러한 산업 전략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통합 특별시 출범과 함께 명확한 정책 우선순위 설정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AI·에너지·모빌리티 산업을 통합 특별시의 핵심 성장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산업 특례와 재정 지원, 규제 완화 방안을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담지 않으면 통합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전제로 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산업 구조 재편과 지역 경제 체질 개선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AI 기술과 에너지 자원을 결합한 초광역 산업 클러스터 구축 여부가 통합 특별시의 실질적 성과를 가늠할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주의 인공지능(AI)·미래모빌리티 산업 역량과 전남의 에너지·우주·바이오 자원을 결합한 초광역 산업 생태계 구축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광주 AI데이터센터와 전남 해상풍력발전 모습. 일부출처=클립아트코리아

광주 백운~매곡 BRT 2028년 개통 예정



옛 대동고 ~ 광천사거리 ~ 광주공고 8.76㎞ 구간
시, 453억 투입…하반기 기본·실시설계 용역 착수

광주 남구 옛 대동고에서 북구 광주공고까지 8.67㎞ 구간을 잇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오는 2028년 운행될 예정이다. 이는 대형 복합쇼핑몰 2종이 들어서는 광천권역 교통난 해소와 승용차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의 교통체계 대전환을 위해 '백운~매곡 BRT' 구축에 나서는 것이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백운~매곡 BRT는 남구 옛 대동고에서 백운교차로~농성교차로~광천사거리~경신여고사거리를 경유해 북구 광주공고에 이르는 8.67㎞ 구간에 도입한다.

총사업비 453억원을 투입해 BRT 전용도로 구축, 정류장 설치·개편, 교차로 교통체계 및 신호운영체계 개선 등이 추진된다. BRT 정류장은 41개소가 운영된다.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버스정류장과 인접한 위치에 중앙정류장 33개소를 설치하고, 8개소는 기존 가로변 정류장을 활용한다.

전용차량은 도로·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친환경 저상버스 7대(예비 1대 포함)를 마련하고, 배차간격은 15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상반기에 백운~매곡 BRT 개발계획 고시를 마치고,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목표 개통 시점은 2028년 말이다.

BRT가 구축되면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21.4㎞/h로 28.9% 향상되고, 이용수요는 1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동시간 단축 등 버스 교통환경 개선과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양동민 기자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국회 심의 본격화

오늘 입법공청회·10~11일 법안심사소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본격화한다.

쟁점별 조정 과정에서 재정 특례의 구체성과 통합 이후 자치·대표성 보완 장치가 어디까지 명문화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2·3·9·11·19면

8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전문가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 공청회를 열고 질의응답을 하는 등 통합 특별법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10일과 11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려 법안에 담길 실질적인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앞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을 법안심사소위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안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를 설치하고 청사를 전남 동부·무안·광주에 두는 방안이 담겼다.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을 규정하는 한편 기존 석유화학·철강·조선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 책무를 명시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